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과 체제 변화*

김동엽(경기대학교)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체제 변화의 유형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고 다양한 진행 경로를 열어놓고 있다. 새로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세습 정권의 연속화를 위해 향후 일정 기간 3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과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정책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경제적 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영합적(zero-sum) 요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단기적 생존 전략으로는 3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적 안정 추구를 통해 3대 세습과 김정은 자신의 사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적 변화와 개방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은 체제를 지탱하기보다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 불가론을 앞세운 북한의 미래 예측에 대한 경직성에서 벗어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김정은, 북한, 정치적 안정, 사회적·경제적 안정, 세습, 제도적 완결성, 사후 정당성, 개방, 체제 변화

* 이 글은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12.11.30)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 문제제기: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연구는 김정은이 정권 생존을 위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정권 차원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연구에서 정권의 안정성과 체제 변화 가능성은 분석의 수준, 층위, 대비 자체가 가지는 불균형성이 존재함에 따라 동시에 논의되기보다 서로 분리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일부 북한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연구하면서 정권과 체제, 국가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혼용함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 부분 위기와 불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회주의체제 변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적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권과 체제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북한의 체제 변화를 김씨 일가의 세습 정권 유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북한 연구에 실제 이를 결부시켜 관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연구 역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논의의 수준이 다른 정권과 체제 간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었다.¹⁾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1974년 2월 조선노동

1) 북한 언론은 이들이 지난 2011년 12월 19일 정오가 되어서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특별 방송 보도를 통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김정일 사망> 북한매체 보도 전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회 총회에서 ‘주체사업의 위대한 계승자’가 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잡은 기간이 37년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북한의 모습은 외부 세계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역시 매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일 장례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직에 올랐다. 이어 올해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김정은은 북한의 당·군·정 3대 권력기구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여 사실상 권력 승계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북한 내부의 모습은 최고 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리 커다란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은 김정일 사망과 함께 북한의 혼란과 위기를 예측했던 이들을 적잖게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²⁾

북한 내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오랜 기간 경제난이 지속되어 오며 따라, 현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안정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내구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을

『연합뉴스』, 2011년 12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426032>(검색일: 2012년 1월 9일).

2)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 안착론과 불안정 심화론이라는 2개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초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운명론을 앞세운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2012년 4월 제4차 당대회와 2012년 7월 리영호 숙청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론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착론에 대한 주장은 장용훈,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 분석,”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0호 자료집(2012.8.29); 한기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력 구도의 특징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2012.10.4); 이기동,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과 권력 구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2012.10.29) 참조.

단순히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대외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2·29 합의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배격하고 미국과의 2·29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남북관계 역시 상호 간의 위협 발언과 비방이 이어지면서 마치 치킨게임을 연상하게 하였다. 여기에 2012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권력 교체와 맞물려 향후 얼마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시작부터 대외적으로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가보다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체제 변화를 예측하는 데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외부적인 위협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자발적 고립은 김정은 정권 초기 북한에 실보다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³⁾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시 지금은 대화나 협상을 통해 크게 얻을 것이 없고 향후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대외적 위협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적 안정에 치중하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

3) 역설적으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고 일면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자세를 보인 것과 당시 한국의 김영삼 정부와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외부 위협을 쉽게 차단하고 오로지 내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상황에서 보면 대외적 위협의 접근을 거부하고 내부의 체제 위협 요인을 제거하면서 내부적으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평가는 명확한 근거보다는 김정일의 사망에 기인한 바 크다. 반면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난은 사회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의 불안정과도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인민 경제가 붕괴되어 민생 파탄을 가져왔고, 통제력 이완에 따른 사회 일탈 행위의 증가와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한과 중국을 통한 정보의 유입과 더불어 의식 변화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외 안보 측면에서 보면 핵, 인권, 위폐, 미사일 전 등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대중국 의존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간섭과 개혁·개방 요구 역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을 막다른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해 보이지만 이러한 판단과는 달리 아직 어느 정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정권 안정과 존속 차원에서 밀접한 연관을 갖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은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 제약과 함께 지속·변화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국제적 압박에도 우선 내부적으로 김정일 사후 권력 구조 변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지속에 따른 사회 불만 증대 등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과제들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책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의 성패는 3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과 성공적인 사후 정당화⁴⁾ 부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김정일 사후 정권을 손에 넣은 김정은이 실제 권력자로서 당면하게 될 북한 내부의 문제와 정책 과제는 권력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 발화 및 가속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난 타개를 통해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여기에는 결국 선군정치를 통해 틀어준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어떠한 모습으로 유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사회 불만 요인을 어떻게 해소하고 인민들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결코 하나로 쉬기 어려운 이질적인 문제가 배태되어 있다. 3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이 주로 정치·군사 분야와 관련된 문제라면 3대 세습이 가지는 사후 정당화는 경제·사회 분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김씨 세습 정권의 영속화를 추구하기 위해 권력 승계의 제도적 완결성과 사후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어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고찰해볼 것이다. 아울러 체제 이론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4) 김갑식은 김정은 정권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시현,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 장악, 정책적 업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3~5 쪽.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혈통을 계승한 만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 역시 권력 승계의 완료와 함께 장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후 정당성은 주로 정책적 업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김정은의 경우에는 경제난 극복 여부가 사후 정당성 확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체제 변화(system change)의 의미

기존 사회주의체제 연구에서 대체로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주의체제 전환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체제전환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사회주의체제 연구 초기에는 ‘정치 변동(political change)’, ‘이행(transition)’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었다. ‘정치 변동(political change)’은 권력관계의 이동과 지배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된 역동적인 정치 과정으로 정치체제 변화의 진행 방향을 배제하고 다양한 변화 경로에 주목하고 있으나 정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행’은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와 같이 정치와 경제라는 두 영역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체제 내적인 제도적 변화에 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환’은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연결망 구조나 문화, 지배적 가치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포함한 것이다.⁵⁾ 즉 ‘체제 전환’이란 일반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됨을 의미하며 이는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질서 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⁶⁾ 이처럼 체제 전환은 정치적·경제적 전환 모

5) ‘전환’은 ‘이행’에 비해 시간적 간극이 넓고 비물질적 변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Frank Bonker, Klaus Müller and Andreas Pickel F.,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ed.),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Cross-Disciplinary approaches*(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pp.1~38.

6) 김일기, “체제 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

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체제 전환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형을 의미하는 것으로⁷⁾ 주로 경제적 체제 전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구체적인 경제체제 전환의 모델을 설정하는 데 지역적·문화적인 차이를 보였음에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모든 국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은 개념적인 명료함과 확장성이 있음에도 ‘이행’과 동일하게 암묵적으로 방향성을 지정하고 있다. 코르나이(János Kornai) 역시 체제 전환을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일당 지배 체제의 변화와 경제적으로는 집중화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⁸⁾ 이러한 개념화에서 보면 사회주의체제 전환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지향성을 강요하고 있어 경로의 다양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오히려 ‘정치 변동(political change)’이 정치라는 한정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진행 경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행(transition)’이나 ‘전환(transformation)’이 아닌 ‘변화(chan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보』, 제10권 1호(2006), 100쪽.

7) 정홍모, 『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 전환으로』(서울: 오름, 2001), 194~201쪽.

8) János Kornai,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and Does Not Mea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Winter 2000), pp.27~42.

9) 정홍모, 『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 전환으로』, 194~201쪽.

코르나이는 체제 변화라는 개념에 ‘체제 전환’과 ‘체제 개혁(system reform)’이 포괄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실 사회주의의 체제 변화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내용에서의 ‘깊이(depth)’와 속도에서의 ‘급진성(radicalism)’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내용에서 부분성과 속도에서 온건성일 경우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전면적이고 속도에서도 급진적일 경우 그것을 ‘혁명(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⁰⁾ 코르나이가 말하는 ‘혁명’은 통칭 ‘체제 전환’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체제가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부문과 이데올로기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로 나아갈 때 이를 ‘체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기본 틀, 특히 정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체제 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코르나이가 변화의 내용과 속도를 통해 구분된 ‘체제 개혁’과 ‘체제 전환’을 통합하여 이를 ‘체제 변화’라고 개념화한 것에 추가하여 기존의 ‘체제 전환’이 가진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지향성과 일방향의 경로 결정을 탈피하고 북한 체제가 보여줄 미래 모습의 다양성을 강조하고자 이 연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²⁾

10)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382~392.

11)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체제 개혁 방식은 이것이 체제 내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개혁을 거쳐 궁극적으로 체제 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유형으로 봐야 하며, 즉 혼용되는 개념들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근식,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 사회주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제2호(2010), 115~118쪽.

12) 이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제 전환이란 표현은

2) 사회주의체제의 유형과 변화 경로

일반적으로 체제의 유형에 대한 구분을 보면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는 여덟 가지 체제 결정 요인을 기준으로 ① 서구적 다원주의 체제(Poly-archy), ② 공산주의 붕괴 후 체제(Post-communist regimes), ③ 동아시아의 정부 형태(East Asian regimes), ④ 이슬람 정부 체제(Islamic regimes), 그리고 ⑤ 군사정부 체제(Military regimes)의 5개 정치체제로 구분하였다.¹³⁾ 헤이우드의 체제구분론은 각 체제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체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에 대한 논의 역시 부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헤이그와 해롭(Hague and Harrop)은 정치체제를 민주화의 정도, 권력의 집중 정도, 1인 통치권자의 권력 장악력 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다. 헤이그와 해롭(Hague and Harrop)은 통치 체제를 ① 민주주의 체제(Democratic regime), ② 유사 민주주의(Pseudo Democratic/ Semi-democratic regime), ③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¹⁴⁾ 위의 세 가지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는 체제 전환과 체제 변화를 동일시하여 혼용하는 것은 아니다.

- 13) 앤드류 헤이우드는 ① 1인, 소수 엘리트, 혹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 등 누가 통치하는가? ② 국민 복종의 이유는 무력, 위협, 협박과 합의에 의한 복종 중 무엇인가? ③ 정부의 권력이 중앙집권적인가 혹은 지방분권적인가? ④ 정부 권력이 세습, 선거, 혹은 쿠데타 등 어떻게 획득되고 이전되는가? 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과 국가의 국민 서비스 정도는 어떤가? ⑥ 국가 경제의 상태는 어떠한가? ⑦ 경제 구조는 시장경제 또는 계획경제인가? ⑧ 체제의 안정성으로 새로운 도전과 내외적 요구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가? 라는 여덟 가지 요인으로 체제를 분석하여 구분하였다. Andrew Heywood, *Political Theory: An Introduction*(New York: MacMillan, 1999), p.29.

현상은 모든 정치체제는 정적인(Static) 상태가 아니라 변화(Change)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성장 발전, 혹은 후퇴하는 정치 과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에 적용하는 데에는 너무 일반적인 설명의 틀이다.

좀 더 사회주의체제에 전문화된 린츠(Juan José Linz)와 스테판(Alfred Stepan)의 연구에서 제시한 체제 분류 도식에 따르면 동독과 체코는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이고 루마니아는 전체주의와 술탄 체제의 혼합 체제이며 쿠바 체제는 동결된 탈전체주의와 술탄 체제의 혼합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¹⁵⁾ 북한 역시 동구의 체제 유형 중에서 동독과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와 유사한 스탈린식 전체주의 체제와 술탄 체제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화에 관한 논의는 1990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전적 사회주의 → 개혁 사회주의 → 사회주의체제

14) Rod Hague and Martin Harro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8th ed.(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9.

15) Juan José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p. xvi.

16) 북한 체제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는 최완규,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파주: 한울, 2001), 11~42쪽;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변화: 비교 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서울: 해남, 2004), 63~117쪽;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 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제9권 2호(2006), 13~19쪽.

전환이라는 경로를 제시하고 개혁 사회주의는 좀 더 세분화하여 사회화→사유화→자유화(민주화)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축적된 긴장과 모순에 의해 촉발된다고 보면서 변화의 요인으로 축적된 경제적 어려움, 대중의 불만 증대, 권력층의 자신감 상실, 외부적인 환경을 들고 있다.¹⁷⁾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역시 체제 전환을 자유화(구체제의 붕괴)→민주화(체제의 교체 및 제도 구축 단계)→공고화(체제의 대체·전환 과정) 단계로 보았다.¹⁸⁾ 이러한 단계의 설명에서 보이듯이 코르나이와 브레진스키는 정치적 변화를 체제 전환의 완성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가 경제 개혁을 통해 점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어 다른 유형의 체제(민주주의)로 전환해 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1970년대 이래 초래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침체가 체제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정치적 변혁에 있다.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도 동유럽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그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체제보다 상위에 있는 정치 및 이념 체제가 동구권에서 변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체제 내적 동력으로 유발되는 모색 과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후에 내려지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진화 과정은 체제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따라 1960~19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의 변

17)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382~392.

18) Zbigniew Brzezinsk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National Interest*, No.33(Fall 1993).

<표 1> 사회주의체제 변화 국가별 사례

유형 (사례 국가)	체제 변화 방식
러시아형 (러시아)	지배 엘리트의 분열(개혁파와 보수파)과 대립 → [소련 해체] → 급진파 엘리트와 금융 과두제 연합 형성(‘보수파’ 몰락)
동유럽형 (루마니아)	지배 엘리트의 잠재적 분열(개혁파와 엘리트 미형성) → [국지적 대중 봉기, 권력 투쟁 내연] → 지배 엘리트의 인적 연속성 유지(특정 분파 제거)
중부 유럽형 (폴란드, 헝가리)	지배 엘리트 개혁파와 반체제 엘리트의 정치적 타협(보수파 고립) → 정치 엘리트의 일부 교체. 경제 엘리트(기술 관료, 경영 엘리트)의 인적 연속성 유지.
중국형 (중국, 베트남)	지배 엘리트(개혁파와 보수파) 내부의 정치적 타협 → 점진적 경제 개혁 추진(정치적 강경 노선 유지) → 지배 엘리트의 내적 통합과 정치체제 지속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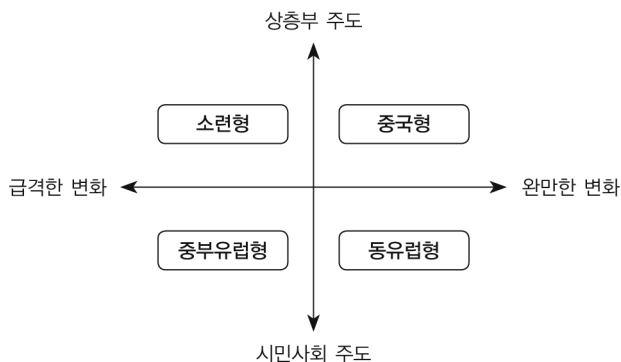
자료: 이무철,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 『한국정치외교학회』, 제33집 1호(2011), 325쪽의 <표 1> 체제 전환 방식의 유형별 구분과 그 특징을 요약.

혁 노력을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선(improvement within the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1989년 중반 이후 시작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정치적 변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¹⁹⁾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동유럽 각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자 본격적인 경제체제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전환이 경제적인 전환에 선행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을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 비슷한 시기에 체제 전환을 경험한 동구권임에도 분명 국가별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동구권 국가의 다양한 체제 전환 형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은 Steven Saxonberg, *The Fall: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d of Communism in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and Poland*(Abingdon: Routledge, 2003) 참조.

<그림 1>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유형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경제적 영역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고, 시장화의 단계가 이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징인 국가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이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체제 변화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포괄적인 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의 개념을 경제체제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정치체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유형은 크게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속도라는 2개의 축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변화의 주체는 위로부터 혁명과 아래로부터 혁명이며, 둘째, 변화의 속도는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체제 변화의 시도가 민중 봉기 및 시민사회의 운동의 결과인가 아니면 지배 엘리트의 결단과 분열의 결과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후자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체제 변화인가 아니면 정치 분야를 제외한 경제 분야의 변화만

을 의미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소련에서는 1985년 이후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대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 개방 조치를 취하였다. 아래로부터 체제 변화의 압력이 분출되고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이 개혁을 이끌지는 못하였고, 지배 엘리트의 재집권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의 분열에 의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 3중전회(中全會) 이래로 고속 성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였지만, 중국의 체제 변화는 경제체제의 전환이며, 정치체제의 전환 혹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포기라 볼 수 없다.

중부 유럽은 서유럽과 가까운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 엘리트들의 정치적 기반이 약했으며, 사회주의체제가 소련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이식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가 정착하지 못해 체제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였다. 1956년 헝가리 사태와 19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운동, 1980년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 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미 다원적인 정치 문화의 영향으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 엘리트들은 민중들의 요구와 시위에 밀려 체제 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방식에 의해 권력이 집중되었고, 체제 내에 정치적 대안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으며, 끝까지 개혁·개방을 거부하여 지배층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대내적 요인보다 주로 소련의 개혁 정책에 따른 유럽에서의 역할 변화가 체제 전환의 주요 동인으

<표 2> 사회주의체제 변화 유형별 특징

유형	속도	상층부	시민사회
소련형	급격한 개혁·개방	지배 엘리트 분열	취약
중국형	완만한 개혁·개방	지배 엘리트 합의	미약
중부유럽형	급격한 개혁·개방	대안 정치 세력	초기 결집
동유럽형	완만한 개혁·개방	지배 엘리트 재집권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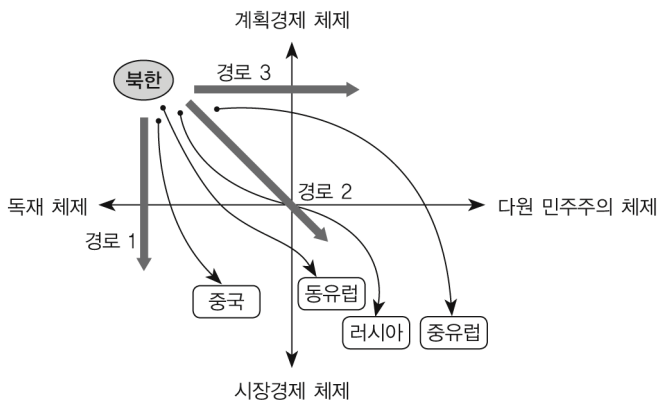
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체제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옛 지배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위의 4개의 유형 분류는 이미 발생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변화에 대해 주체와 속도에 따라 특징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모델로서는 유용하나 예측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 과연 북한이 4개의 유형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느 유형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역동적인 새로운 설명의 틀이 필요하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체제 전환을 정치 영역에서 다원 민주주의로 이동, 경제 영역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동이라는 2개의 축으로 설명한다.²⁰⁾ 또는 민신 페이(Minxin Pei)는 공산주의 체제 이행의 발전적

20) 체제 전환은 코르나이의 ‘개혁’과 ‘변혁’의 구분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관료적 조정 기제의 우세,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서 ‘영구적이고 본질적으로(permanently and essentially)’ 변화가 나타난다면 ‘개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혁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위 세 가지(political structure, property relations, coordination mechanism) 중 하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만큼 ‘깊어야(deep)’하고, 둘째 적어도 ‘적당히 급진적(moderately radical)’이어야 하며, 셋째 ‘체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르나이는 인과적 연관성의

<그림 2> 김정은 정권의 변화 경로



(heuristic) 모델로 ① 점진적 방식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경로(the evolutionary authoritarian route), ② 혁명적 방식의 이중 돌파 경로(the revolutionary double-breakthrough route), ③ 동시 단일 돌파 경로(the simultaneous single-breakthrough route)의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²¹⁾ 이를 혼합하여 적용하면 북한과 같이 억압되고 통제된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체제의 변환적 양상(Transitional phenomena)은 크게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2개의 축으로 하여 발생

주된 경로 중 최고 수준인 정치 구조(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의 급진적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혁명이라 할 수 있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보았다. 요컨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독점적 권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모든 변화는 개혁 이상의 변화, 즉 변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382~392.

21) Minxin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p.18~42.

가능한 북한의 변화 경로를 도식화해보았다. 이 도식에 앞서 살펴본 사회주의체제 변화 4개 유형을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표현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변화는 경쟁적 관계의 등장에서 시작된다. 1인 통치 체제의 대항마가 등장하거나, 정권의 승계 과정에서 다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경쟁하며 알력을 보이면서 내부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다원적 정치 엘리트의 등장은 정권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림 2>의 횡축의 독재 체제에서 다원 민주주의 체제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적 다원화(pluralization)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제 어느 나라든 주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경을 초월한 영향력은 아무리 차단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아무리 폐쇄적이고 계획경제 체제라고 할지라도 원시적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변화의 물결은 경제 상황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어떠한 경우에는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는 유지하기가 쉬운 경향도 나타난다. 이는 <그림 2>의 종축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까지의 스펙트럼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자유화(liberalization)를 포함하여 경제적 개방화(openness)라 개념화하고자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을 정치적 다원화와 경제적 개방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4개 모형의 정적인 평가 모델의 한계로 제시한 경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변화는 ‘경로 1’로 변혁(revolution)이라기보다는 개혁(reform)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체제 변화 차원에서 권력 승계의 제도적 완결성을 위한 정치적 안정

추구가 정치적 다원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후 정당화 확보를 위한 경제난 극복 노력이 경제적 개방화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 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상이다. 그러나 변화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무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어느 하나가 먼저 시작되면서 상호 영향을 미쳐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동시에 2가지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체제 변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먼저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정치 분야 생존 전략과 정치체제 변화의 한계

1) 정치적 안정 추구를 통한 세습 정권의 제도적 완결성 확보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후계자임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사망 이후 4개월 만에 권력 승계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과거 김일성 사망 이후 4년이나 걸린 승계 기간이나 김정일이 20년 이상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이러한 3대 세습 체제로의 시도는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권력 구조와 서열, 인물 배치와 같은 정치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변화는 안정보다 분명 불안정적인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일이 3대 세습을 선택할 수밖에

에 없었던 것은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북한이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에서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연장하고 정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합리적 선택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²²⁾ 김정일은 북한이라는 국가 유지 차원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영속화는 3대 세습을 통한 확실한 유일지배체제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3대 세습이 가지는 무수한 부정적 요인과 비난에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3대 세습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권력 승계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60여 년간 김일성·김정일 왕조를 유지시켜온 독특한 정치체제로 인해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집단지도체제²³⁾나 3자 승계, 섭정²⁴⁾은 오히려 권력투쟁과 같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

22) 김정남이 일본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3대 세습에 반대하면서도 “세습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내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

23) 한때 국방위원회 중심의 군부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글은 고유환, “김정일 건강 변수와 후계 구축의 시나리오” 『KDI 북한 경제 리뷰』(2008.9); 전봉근, “북한의 권력 변동 시나리오 연구: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주요 국제문제 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8.10.10); 이대근, “북한 권력 구조 변화의 조건과 전망: 김정일 후계 구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2009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9, 격동의 한반도: 오늘과 내일』(2009.3.27), 69쪽 참조.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을 주장한 학자들 중에는 중심 주도 세력에 따라 크게 당 또는 군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제시하였는데 당 중심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대표적 주장은 이대근의 위의 글이며 군 중심 주장으로는 켄 고스(Ken Gause)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인터뷰 내용에 대한 『세계일보』 2008년 9월 22일 자 기사와 김갑식, “북한의 후계문제와 권력체계의 변화,” 『한반도포커스』, 장간호(2009), 5쪽 등을 참조할 것.

24) 일부에서 장성택에 의한 섭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장성택은 이미 한 차례 권력 중심에서는 축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후견인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4차 당대표자회 결과에서도

안을 증가시켜 정권 붕괴와 체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일이 자신의 사후에도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유형이 집단지도체제나 3자 승계, 섭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정남·정철이 아닌 3남인 정은을 간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이 정남·정철을 제쳐 두고 정은을 선택한 것도 김일성·김정일 혈통으로 아들 3명 가운데 김일성과 외모가 흡사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김일성·김정일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려는 자각과 반대로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척 정신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정일이 정남·정철이 아닌 정은을 선택한 데에는 김정일에 절대복종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정은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김정일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2대 세습은 김정일 스스로가 오랜 시간 쟁취한 사전 정당성 획득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결정되어 사전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정일로의 2대 세습이 그 나름의 개인적 역량과 북한의 시스템이 결합된 것이라면 결국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1차적으로 제도화에 의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김일성·김정일과 같이 이상화, 신격화를 통한 사전 정당성을 앞세운 권력 장악은 애시 당초 불가능했다. 사전 정당성 측면에서

장성택은 예상과 달리 높은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만 본다면 분명 권력은 미완성이나 제도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승계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결국 일천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제도에 의한 권력 승계가 먼저이고, 그다음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권력 승계를 가능하게 한 제도의 완결성을 추구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²⁵⁾

김정은 정권 초기 대내외 불안정과 긴장 및 이로 인한 북한의 위협 인식이 지속되는 한 선군정치 노선이 바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 북한의 오랜 유일 지배 전통과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개정이 결합하여 군을 김정은의 복종하에 묶어 두기 위한 강력한 다중 장치를 마련하였다. 김정은에게 군 관련 직책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 역시 선군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오히려 너무 비대해진 군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당을 통한 군부 내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군에서 당으로 연결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닌 ‘혁명영도’의 역사적 일관성을 후계자인 김정은에게도 적용하려는 치밀히 계획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가장 먼저 군 관련 직책을 부여한 것에 대해 단순히 김정은이 군부를 우선 장악하기 위한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김정은의 군부 장악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현재

25) 이러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아직 단일지도체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권력의 집중도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제한적 1인 지배체제’ 또는 ‘단일성 과두제’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제’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 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2012.4.23);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분석,” 5쪽.

완료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에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모든 군권을 미리 물려받아 이미 군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다.²⁶⁾ 이 같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김정은도 권력 승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정일 사망 이전 ‘수령(김정일)의 군대’가 ‘수령(김정일)과 수령의 후계자(김정은)의 군대’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군부는 선군정치하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반면 외형적 공고성 이면에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선군정치 표방 이후 김정일과 군부 간에는 강력한 결속과 연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최고의 지도자가 군부의 수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당·군·정 관계의 왜곡으로 인하여 많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급격한 내부 불안정 사태에 직면할 경우 군부가 갈등과

26) 김일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조직 비서’가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77년 8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 간부들의 당 조직 생활을 철저히 장악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979년 2월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당 사업과 군사 사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우도록 했다.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1982년 6월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 군에 김정일의 명령지휘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조치를 취했다. 1990년대에 들어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군 통수권과 국방 사업에 대한 전권까지 이양하게 된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됨으로써 군 통수권을 물려받았다. 김정일은 1993년 4월 9일 최고 인민회의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국방 사업에 대한 지도 권한도 물려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15~264쪽.

위기를 고조시킬 주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화 이전 북한 내 권력투쟁과 파벌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전면에서 나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거나 쿠데타,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군부의 전통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군부가 일방적으로 몰릴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 개혁·개방 과정에서 군부의 소외와 탈정치화 과정은 군부 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에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이다.

2) 정치체제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

정치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핵심 통치 세력에 대한 도전과 군, 정보, 사법 세력 등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앙 통제적 집권 세력이 도전받게 되는 상황은 무엇보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완전한 권력 이양을 통해 새로운 통치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권력 세력 간 혹은 통제 세력 간의 알력 혹은 견제 등의 상황 등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화, 개방화 등의 압력과 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 집권 세력은 변화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다양한 권력의 분화, 대립, 도전 현상을 다원화라 표현할 수 있다.²⁷⁾ 즉 다원적 협치(Pluralistic governance)는 권력의

27) Andrew Heywood, *Politics*(London: Macmillan, 1997), p.76.

일원성에서 벗어나, 통치 구조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균형 있는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의 결정 양식에서 1인 독재체제하에서는 독재자의 결정이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고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일사불란하게 시행되지만 다원적 정치체제하에서는 사안별로 관련된 정치행위자(정당, 이익단체, 사회단체 등)가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원적 정치 구조하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정치 행위자들이 모든 정책 과정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라 사안별로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이 그 사안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의 다원성은 권력의 분점, 탈권위화 그리고 권력의 분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정치적 지형에서는 단일 정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권력의 경쟁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²⁸⁾ 이는 결국 독재체제와 같은 통치 구조 하에서도 권력의 1인 집중 현상이 다수의 권력에 의해 견제되고, 기존의 통치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현재 지배 기구 및 엘리트의 다원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와 함께 지배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평가는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형적 모습과 체제 특성상 이러한 체제를 경험한 사회주의체제 전환 국가의 사례를 본다면 북한에서 현상부 엘리트 집단에 의한, 즉 위로부터의 체제 변화, 즉 정치체제의

28) Rod Hague and Martin Harro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p.231.

변화는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²⁹⁾

그러나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완료되었다는 것과 안정되었다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3대 세습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김정은은 일정 기간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여건과 환경에 순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른바 ‘유훈통치’를 통해 김정일 정권과 일체화시켰다.³⁰⁾ 따라서 기존의 선군정치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당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군정치가 김정은 정권에 정책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군 유지로 야기되는 군부와 보수적 성향의 인적 구성은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엘리트의 부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물론 선군정치가 무조건 경제 문제와 같은 변화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부가 경제 변화 과정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창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층의 등장과 당적 통제 약화 등 당·군·정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권의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우선적으로 주변의 긴장 구조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보수적 성향의 인물들이 정책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선군정치의 전환을 추구할 가능성

29)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 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pp.39~40.

30) 북한은 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면서 김정일의 ‘10·8 유훈’을 언급하였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도 김정은의 추대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과 2012년 4월 12일.

도 있다.

선군정치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또 하나의 제약은 정권 초기 정치적 안정 추구를 위해 과도한 당 중심 운영이 오히려 장기적이며 복합적인 측면, 특히 강제적 관점에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과 한 사람의 수령에게 집중화된 북한의 특이한 정책 결정 구조는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조성하여 당과 수령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가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당을 통해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최근 김정은이 당을 통해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당에 편중된 시각은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예측하는 데 잘못된 시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 초기 3대 세습에 따른 권력의 안정적 유지 차원에서는 당이 분명 우선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단순히 권력 장악을 통한 공포의 정치적 안정이 아닌 경제나 사회, 대외 안보적 문제와 연관하여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실제 정책의 시행에서는 당 조직뿐만 아니라 당적 지도하에 국가기관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담화에서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 발전 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전망성 있게 세우며 경제 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업

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³¹⁾ 이와 같이 김정은이 향후에도 오로지 당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권력 기반은 당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 국정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정책 결정은 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가 당국가 체제만으로는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권의 영속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양극화된 냉전 시기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였을 때와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당 대 당 또는 국가 대 당의 관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 쿠바 등과 같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변화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국가 중심의 정치체제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을 전면에 내세워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³²⁾ 결국 내

31)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 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주체 101(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32) 북한은 남한, 일본, 러시아와 같이 당보다 국가가 위에 있는 체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서명한다. 이와는 달리 같은 당 국가체제인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보다 ‘당 총비서’ 직을 내세운다. “조로공동선언 전문,” 『조선중앙통신』, 2000년 7월 20일; “북 TV, 북·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연합뉴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총비서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 『조선중앙통신』, 2000년 6월 1일 참조.

부적인 정치적 안정과는 별도로 외부적으로는 당 조직이 아닌 국가 조직을 통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형성이 정권 생존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북한의 노동당을 보고 투자를 하고 노동당과 거래를 하려고 할지에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만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실제 중국 민간 기업의 투자나 거래에서는 북한의 당 조직과 관계가 형성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정상적인 국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특히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일면 국가기구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³³⁾

그러나 이러한 가정만으로 지금 당장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 쉽게 분산되거나 정치체제의 다원화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선군 정치와 북한의 당 국가체제는 결국 정치적 안정을 우선하는 봉건적 정치 문화와 정책 결정 과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생존 전략의 핵심은 선군정치와 당

33) 북한은 2010년 1월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 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대외 경제 협력 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자금 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평양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국방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20일.

국가체제의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변화시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적절한 전환점의 선택에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가시화 시점까지는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그 이후에나 전환의 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의미 있는 정치체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 분야 생존 전략과 경제체제 변화 가능성

1) 경제난 극복을 통한 사후 정당성 획득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경제적 과제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난의 타개와 경제 정상화일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0여 년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2009년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진단이다.³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 경쟁력, 노동 의욕의 저하인 3저(低)와 여전히 식량,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외화의 부족인 3난(難)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근본적인 부족에서 오는 악순환이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다.³⁵⁾ 이러한 3저3난 현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계획경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마비되어

34)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31~32쪽.

35) 성채기 외,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 증강 능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12~18쪽.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국방 공업 중심의 선군경제 노선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³⁶⁾ 이는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와 정책 기조를 효율적인 체제와 기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김정일 정권뿐만 아니라 현재 김정은 정권 역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기조의 변화와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김정일이 2010년 5월과 8월,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을 연이어 방문한 목적을 두고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³⁷⁾ 김정은의 개혁·개방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은의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은 과거 7·1조치를 비롯하여 조심스럽게나마 경제 개혁과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차례 개혁·개방의 시도와 이에 뒤이은 역행을 두고 개혁·개방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고 있

36)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 연구: 비교 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 연구』, 제11권 2호(2002), 128~145쪽;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 정책 평가: ‘선군경제 노선’을 중심으로,” 『수은 북한 경제』, 여름호(2009), 23쪽.

37) 2010년 8월 방문 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경제 건설 중심을 건정불이(堅定不移)하게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민생을 보장·개선하는 것이 30여 년간 진행해온 중국의 개혁·개방의 기본 경험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자력갱생은 물론 대남 협력도 떠날 수 없으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나라 발전을 다그치는 필요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중국은 개혁·개방 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도처에서 생기가 넘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 회의적인 시각은 북한이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즉 개방은 필연적으로 불안정과 붕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론적 시각으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단정적인 예측은 결국 북한의 개방불가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또 역설적으로 개방 없이 북한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이다.

북한은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보다는 체제 내의 변화와 개선에 국한하는 정책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당분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³⁹⁾ 선군정치를 유지하는 한 북한 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군정치로 인해 북한 경제가 더욱 악화된다거나 주민들의 불만으로 견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⁴⁰⁾ 오히려 선군 유지는 경제난 극복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더 악화시키지는

38)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은 근원적으로 붕괴의 위협을 안고 있어 결국 북한의 개혁은 현 단계에서 정치, 이데올로기 부문에 대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경제 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전환이라기보다는 체제 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기, “사회주의체제 변화론에 입각한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학술회의(2006), 19쪽.

39) 북한은 피포위의식(under siege consciousness) 속에 선군경제 운영이 개혁·개방에 따른 체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북한이 핵과 개혁·개방을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조건에서 선군경제 운영을 포기한 채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병욱,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선군경제 운영과 국제 사회 변화 동향,” 『KDI 북한 경제 리뷰』(2012.2), 84~85쪽;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46쪽.

40)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이하이고 1990~200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 이하인 26개 국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비록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독재 정권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박형중,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통일 과정,” 『북한 어디로 가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286~288쪽.

않으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그럭저럭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지속에 따른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선군정치와 핵을 포기하고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적 개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결국 북한이 가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볼 때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외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대규모의 개방과 내부의 획기적 개혁 조치 없이는 경제 위기의 극복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과 선군의 포기라는 결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에서 개방·개혁은 물과 불의 관계로 수용이 불가하다. 더욱이 북핵, 인권, 미사일 문제 등의 해결 이전에 국제사회의 지원 협력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핵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지원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역시 북한의 경제난을 완전히 해소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만큼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경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권 체제 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내부적 개혁이 상당 부분 선행되어야만 외부 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

에 도달할 것이다. 내부 개혁이 진행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자본 지원은 반드시 내부적 개혁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북한의 현상 유지는 중국에 집중된 대외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 유지의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대외 의존성 심화로 무역이 증가세를 보이거나 대중 무역이 기형적으로 확대되면서 여타 국가와의 무역은 오히려 급감하는 불균형적인 무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⁴¹⁾ 이러한 경제 구조는 얼마간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절대적인 경제지표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고 요구하는 상대적 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상대적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²⁾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경제난 해소

41)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32~34쪽.

42) 이를 집합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social-psychological approach)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본격적인 혁명 이론으로 발전시킨 데이비스(J. C. Davies)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절대적 박탈(absolute deprivation)의 상황에서는 집합행동에 잘 참여하지 않으나 경제적 상승으로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social discontent)이 사회적 저항을 폭발적으로 표면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J-곡선 이론(J-curve theory)을 제시하였다. James C. Davi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no. 1(1962, Feb.), pp.5~19. 게쉬웬더(J. A. Geschwender)는 데이비스의 J-곡선만으로는 혁명 및 사회운동 발생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며 사회경제적 조건의 상승과 하강, 기대의 상승, 하향 이동, 지위의 불일치 등도 발생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혁명의 인지부조화이론’을 제시하여 J-곡선 이론을 확장하였다. James A. Geschwender, “Social Structure and the Negro Revolt: An Examination

와 경제 정상화를 통한 주민 생활 향상은 정권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김정은이 주민들로부터 인정과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2) 개혁·개방의 가능성 증대와 경제체제 변화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의 부정과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당분간 ‘우리식 사회주의’와 ‘모기장식 개방’을 고수해 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북한이 자체 내구력으로 유지되면서 북한식 변화 전략에 따라 북한식 변화의 틀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북·중관계가 북한식 변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 변화는 북한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도 주요 변수는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정책으로, 이는 북한의 변화의 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성대국에 사상·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얘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 강국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사상·정치는 주체사상을 앞세운 김일성 뒤편이었고, 군사는 선군정치의 김정일 뒤편이라고 본다

of Some Hypotheses,” *Social Forces*, vol. 43, issue 2(1964), pp.248~256. 이외에도 거(Gurr)와 파이어라벤드(Feierabend) 부부는 데이비스의 J-곡선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상대적 박탈 이론(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 R. Gurr, *Why Men Rebel?*(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Ivo Feierabend and N. R. Feierabend, “Social Change and Political Violence: Cross-National Patterns,” H. D. Graham and T. R. Gurr eds., *Violence in Americ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pp.497~535.

면 앞으로 김정은에게 맡겨진 임무는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나름의 새로운 경제 구상을 펼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계승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차츰 김정일 시대와는 차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즉 수령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되 ‘북한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유지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 회복이지만, 이 두 가지 과제의 동시적 해결은 딜레마적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수령절대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사회체제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경제 회복은 적극적인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 시기에 북한은 이 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군정치 방식에 토대를 둔 강성대국 건설론”을 21세기 김정일 시대의 전략으로 규정하고, 수령절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군정치 노선을 표방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라는 얼핏 보아 상호 모순된 두 가지 생존 전략을 내세웠다. 물론 북한의 입장으로서 이 두 목표 중 수령절대체제 유지가 우선순위 목표이므로 실용주의 노선과 대외 개방은 이 우선순위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왔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 역시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선군경제 노선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개혁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더 많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 과감한 개혁·개방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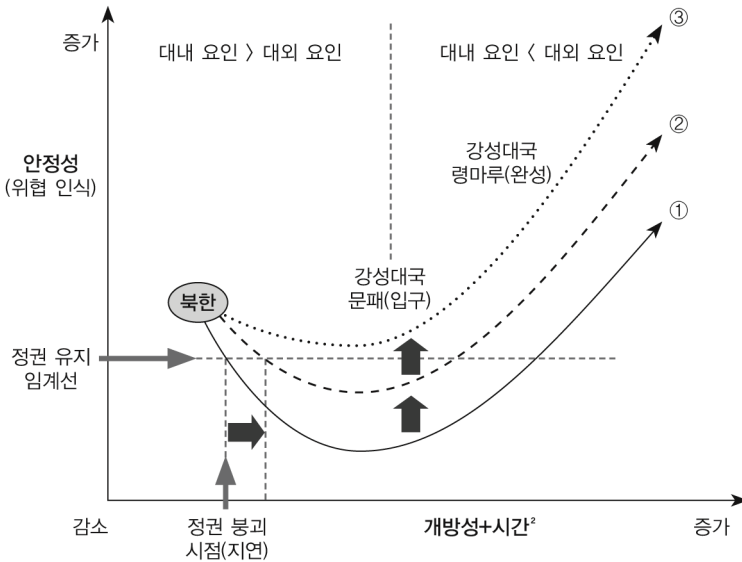
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대안은 시장 경제체제의 요소를 더욱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기존의 체제와 갈등을 야기하여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김정은의 북한은 이중 경제 구조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공급 제약이 지속되는 한 계획경제의 축소 및 시장경제의 확대 경향으로 인해 이중 경제 구조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의미 있는 개방화 없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불안정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과연 폐쇄적인 사회의 개방은 반드시 불안정과 사회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잘 표현한 것이 이안 브레머(Ian Bremmer)가 제시한 J-커브이다.

J-커브를 보면 폐쇄된 사회는 개방으로 인해 일정 기간 안정성이 하락하다가 다시 안정성을 회복하는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한 사회의 J-커브 곡선이 하나의 정해진 곡률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가 가지는 곡선의 곡률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림3>의 ①과 ②와 같이 정권 유지에 필요한 안정성의 한계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고 ③과 같이 다소의 불안정을 수반하지만 정권을 존속하면서 다시 안정성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이제는 개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황축은 개방과 함께 시간의 자승(시간²)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오히려 북한에게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43) James C. Davi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p.6; Ian Bremmer, *The J-Curve: A New Way to Understand Why Nations Rise and Fall*(Simon & Schuster, Inc., 2006); 이안 브레머, 『J커브』, 진영욱 옮김(서울: 베리타스북스, 2007)에서 아이

<그림 3> 김정은 정권의 생존곡선(J-curve)⁴³⁾



대책이나 손쓸 겨를 없이 개혁·개방으로 내몰리기 보다는 스스로 안정성 곡선의 곡률을 위로 끌어올려 정권 유지의 임계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밀고 당기는(push and pull)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향후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시장경제 운영 방식이 안고 있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획경제 내에 흡수시켜 경제 정상화의 출로를 찾겠다고 하여 그것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 기업들의 일부 자율적인 가격 규제나 계획 작성이 국가 해당기관의 등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

다이어를 얻어 새롭게 작성한 것임.

하는 등 계획경제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시장경제적 요소들은 현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실리적 수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체제 이행기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단기간 내 체제 위협이 따르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은 근원적으로 위기로 치달을 위협을 안고 있는 것이다. 즉 선부른 개혁·개방은 북한 내 이해집단 간의 균열과 반대 세력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상대적 박탈감을 이끌어내어 더 높은 차원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체제 하에서 과거 동독의 흡수통일 사례를 통하여 북한은 접근을 통한 변화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구권 국가의 몰락을 개방·개혁에 의한 외부 사조와 기회주의가 침식한 결과이자 반혁명 세력이 결탁한 탓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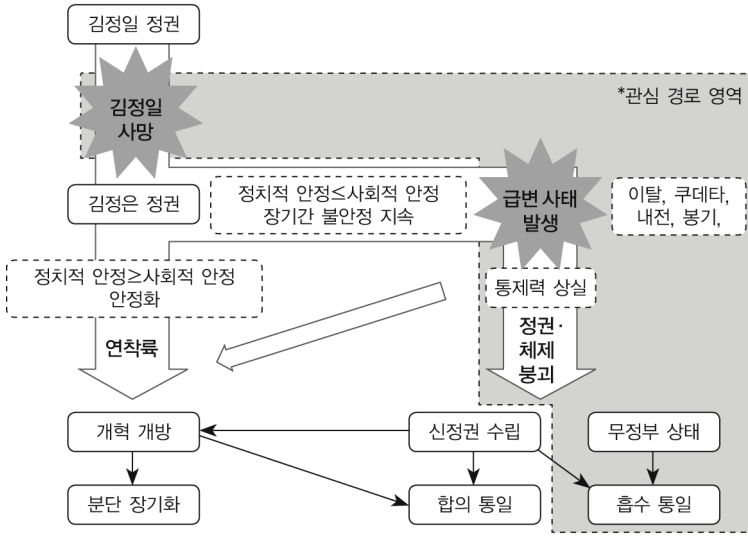
결국 김정은 정권에서도 개혁은 현 단계에서 정치, 이데올로기 부문에 대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경제 부문에 대한 제한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연히 체제 전환이라기보다는 체제 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지탱하기보다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결론: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의 딜레마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체제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김정일이 사망했음에도 이로 인해 급격한 변화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김정일의 공백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고 북한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인 여타 국가 지도자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회적 어수선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주요 관심 영역은 북한의 불안정과 급변 사태라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에 함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우선순위를 둔 예측은 체제 변화 경로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북한 체제의 내구성 및 위기관리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김정일 사망 = 급변 사태 발생 = 북한 붕괴』라는 자기 충족적(self-fulfilling) 인식의 오류 사례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의 북한 급변 사태 발생 및 붕괴론 만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게 된 시스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혹시 단시간 내 낮은 수준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은 <그림 4>와 같이 김정은 체제가 다양한 미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김정은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실제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김정은을 중심으로 지속과 변화를 모색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그림 4> 북한 미래 가상 시나리오 예측의 다양성



많은 제약 조건이 달려 있다.

우선 정치적 안정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기존 권력층들의 결집력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해주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선군정치를 통해 지탱해온 정치적 안정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나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반면 사회적 안정은 경제난 등에서 야기된 인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과 같은 강력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논의는 성립되기 어렵고⁴⁴⁾ 또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현 단계 북한에 시민사회론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북한은 선호위장⁴⁵⁾이나

44) Steven Saxonberg, *The Fall: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d of Communism in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and Poland*, pp.207~225.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⁴⁶⁾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시민사회 자체가 부재하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형성 및 조직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⁴⁷⁾ 상부 엘리트층의 쿠데타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권의 정당성의 문제와 통제와 치안의 부재로 인하여 안정되기 이전에 민중 봉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에는 무정부 혼란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실용적 수용(pragmatic acceptance)⁴⁸⁾을 거부했던 동독이나, 체코, 루마니아가 폭력적 전환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⁴⁹⁾ 북한 역시 실용적 수용 측면에서

45) 선호위장이란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이 사적인 선호와 공적인 선호라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사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 양식을 보임에 따라 개인이 공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와 실제 지향하는 가치 및 행동에 괴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인민들이 체제에 순응하는 것도 감시와 처벌 때문으로 인민들이 혁명적 세력으로 급변한 것은 위장되어 감추어져 있던 인민들의 저항 의식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1991), pp.13~47.

46) 정치적 효능감이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정치 과정이나, 지도자의 행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pp.55~84 참조.

47)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과주: 한울, 2001), 188~218쪽.

48)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실용적 수용(pragmatic acceptance)과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미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좀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는 Steven Saxonberg, *The Fall: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d of Communism in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and Poland*, pp.167~205, 265~299 참조.

49) 권만학, "탈국가 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제4호(2002), 250~251쪽.

보면 선군정치 역시 비타협적 개혁일 수밖에 없고, 시발점이 누구이든 간에 그 결과인 종착점은 폭력적인 전환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 북한의 경우 권력층과 주민들의 이익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은 상호 보완적인 비영합(non zero-sum)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영합(zero-sum)에 가깝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이끌어가는 김정은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달리 말해 새로운 김정은 정권이 기존 집권층의 기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이익을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노쇠한 북한의 권력층의 특성상 새로운 권력의 추구나 자기희생을 감수한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⁰⁾ 따라서 권력층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선택할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당분간 지켜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직은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김정은도 소수의 권력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은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에서 이어진 김씨 세습 정권 생존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은 상황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여서도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라는 근본적인 담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고 보완하는 새

50) 오경섭도 세습일 경우 기존 핵심 엘리트들이 일단 기존의 특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습 후계자를 지지하는 행동을 취하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경섭, “북한 체제의 안정화 요인과 변화 요인,” 『세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2.3.14), 6쪽.

로운 하위 담론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속성과 미세한 변화를 결합하는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이 오로지 정치적 안정만을 선택하고 사회적 안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은 내재된 모순과 체제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어 있으며, 이 같은 모순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 내에 변화의 동인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할 것이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사회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안정이나 사회적 안정이라는 양자택일의 정책 선택 상황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라는 일정한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화 가능성은 위기 상황의 역동성, 근대화론적 결론, 수동적 적응의 역동성에 의한 것이든 일단 시작된 변화와 개혁이라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체제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⁵¹⁾ 따라서 북한 체제는 결국 자의든 타의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개방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은 강제로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북한을 변화로 밀어낼 것이다. 그것이 비록 정권 생존을 위한 작은 전략적 변화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변화가 다

51) 김근식, “북한 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1호(1999), 316~321쪽.

양한 경로와 형태의 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결국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딜레마이며, 우리 역시 북한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북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 접수: 10월 31일 / 수정: 11월 29일 / 채택: 12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주체101(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 『로동신문』, 2006년 11월 27일.

“김정일 총비서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 『조선중앙통신』, 2000년 6월 1일.

“조로공동선언 전문,” 『조선중앙통신』, 2000년 7월 20일.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2일.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변화: 비교 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서울: 해남, 2004).

성채기 외,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 증강 능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이안 브레머, 『J커브』, 진영욱 옮김(서울: 베리타스북스, 2007).

조성렬, 『북한의 위기 관리 체제와 우리의 대응 방안』,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 용역보고서(2006).

2) 논문

- 고유환, “김정일 건강 변수와 후계 구축의 시나리오,” 『KDI 북한 경제 리뷰』(2008.9).
- 권민학, “탈국가 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제4호(2002).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 _____, “북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제126호(2010).
- _____, “북한의 후계 문제와 권력체계의 변화,” 『한반도포커스』, 창간호(2009).
- 김근식,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 사회주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제2호(2010), 115~118쪽.
- _____, “북한 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 김병욱,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선군경제 운영과 국제사회 변화 동향,” 『KDI 북한 경제 리뷰』(2012.2).
- 김일기, “사회주의체제 변화론에 입각한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학술회의(2006).
- _____, “체제 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2006).
- 박형중,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통일 과정,” 『북한, 어디로 가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 오경섭, “북한 체제의 안정화 요인과 변화 요인,” 『세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2012.3.14).
- 이기동,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과 권력 구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2012.10.29).
- _____,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제’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 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2012.4.23).
- 이대근, “북한 권력 구조 변화의 조건과 전망: 김정일 후계 구도를 중심으로,”

- 『2009, 격동의 한반도: 오늘과 내일』, 북한연구학회 2009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2009.3.27).
-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과주: 한울, 2001).
-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 정책 평가: ‘선군경제 노선’을 중심으로,” 『수은 북한 경제』, 여름호(2009).
- 장용훈,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 분석,”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0호 자료집(2012.8.29).
- 전봉근, “북한의 권력 변동 시나리오 연구: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주요 국제문제 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8.10.10).
- 정홍모, 『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 전환으로』(서울: 오름, 2001).
-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 연구: 비교 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2002).
-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 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현대 북한연구』, 제9권 2호(2006).
- _____,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과주: 한울, 2001).
- 한기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력 구도의 특징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2012.10.4).

3) 기타 자료

-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2009년 북한 헌법 개정과 북한 체제 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2009.10.20).
- “<김정일 사망> 북한매체 보도 전문,” 『연합뉴스』, 2011년 12월 19일.
- “김일성 위원장 갑작스런 유고 시 군벌 갈등 충돌 가능성,” 자유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2006년 12월 20일.

“북 TV, 북·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연합뉴스』, 2002년 9월 17일.
 『세계일보』, 2008년 9월 22일.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
 황일도, “전 북한 핵심관료 육필 수기 3탄 ‘프룬제 아카데미 사건’과 ‘6군단 사건,’” 『신동아』, 2006년 3월호.

3. 국외 자료

Bonker, Frank, Müller, Klaus and F.,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ed.),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Cross-Disciplinary approaches*(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Bremmer, Ian, *The J-Curve: A New Way to Understand Why Nations Rise and Fall*, (Simon & Schuster, Inc., 2006).

Brezinski, Zbigniew,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National Interest*, No.33 (Fall, 1993).

Davie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no. 1(1962).

Feierabend, Ivo and Feierabend, N. R. “Social Change and Political Violence: Cross-National Patterns,” H. D. Graham and T. R. Gurr eds., *Violence in Americ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Geschwender, James A, “Social Structure and the Negro Revolt: An Examination of Some Hypotheses,” *Social Forces*, vol. 43, issue 2(1964).

Gurr, T. R., *Why Men Rebel?*(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Heywood, Andrew, *Political Theory: An Introduction*(New York: MacMillan, 1999).
 _____, *Politics*(London: Macmillan, 1997).

Hague, Rod and Harrop, Martin,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8th ed.(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Kornai, János,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 and Does Not Mea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Winter 2000).
- _____,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Kuran, Timur,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1991).
- Linz, Juan J. & Stepan, Alfred, *Problem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Lopez, Juan J.,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 Pei, Minxin,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Saxonberg, Steven, *The Fall: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d of Communism in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and Poland*(Abingdon: Routledge, 2003).

Kim Jong Un Regime's Survival Strategy and System Change

Kim, Dongyub(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assesses that the policies being conducted for Kim Jong Un regime's survival will bring about changes in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However, it leaves open for the various path the system change may take rather than predicting a specific type of system change. The relatively new Kim Jong Un regime is appeared to put its priority efforts in domestic policies to establish institutional completion and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Kim Jong Un regime, facing a domestic policy dilemma of choosing the priority between zero-sum factors of political stability and socio-economic stability, may seek political stability through 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as the short-term strategy. However, as a mid to long-term survival strategy, the possibility of a gradual policy change and market opening to gain a recognition of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cannot be eliminated. At the end, the survival strategy of Kim

Jong Un regime will act as the causal factor that initiates a change rather than maintaining the system.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change, one must avoid the inflexibility of predicting North Korea's future and establish inter-Korean policies.

Keywords: Kim Jong Un Regime, political stability, socio-economic stability, power succession, systematic completion, legitimacy, open-door policy, system change